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책형)

— 해설 : 이명훈 교수 —

<<총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지방직 9급 행정학은 과거 기출 지문의 반복적 출제보다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출제 및 세부적인 법령에 대한 출제가 여러 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체감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들이 답을 찾기에 용이하게 구성되어서 하이패스 행정학을 중심으로 이해중심의 학습을 꾸준히 해 온 수험생이라면 고득점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소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는 [문제 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 [문제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문제, [문제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의 주민 수에 대한 문제, [문제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문제, [문제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관한 문제, [문제 20] 유연근무제도에 관한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9], [문제10], [문제15] 등 이론이나 제도에 관한 문제는 수업시간에 자세히 다뤘던 주제들로 배운 내용을 상기하여 풀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 13], [문제 18], [문제 20] 등 세부적인 법령에 관한 문제는 법령 내용을 세세히 학습하지 않았다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들 역시 나머지 지문들이 성실히 하이패스 행정학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이라면 답을 찾기에 용이하게 구성된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당부드릴 것은 지금부터는 지방직 시험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틀린 문제들을 반드시 점검하여 다음 시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답) ① 행정관리론은 엽관주의의 폐해(부패와 무능력)를 극복하기 위해 절약과 능률성을 중시하였다(하이패스 행정학 p20).

<<오답정리>>

- ② 신행정론은 흑인폭동, 신구갈등, 월남전 패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1960년대 미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과 고객에의 대응성을 중시하였으나 탈규제를 추구한 것은 아니다.
- ③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하였다.
- ④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실패뿐만 아니라 시장실패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고객에의 대응성보다는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였다.

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상황이론 - 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 ③ 자원의존이론 -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④ 대리인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답) ④ 조직경제학 중 하나인 대리인 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에 의한 대리인 통제를 강조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129).

<<핵심체크>> 대리인 이론

의의	한 사람(주인)이 다른 사람(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그의 재량으로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있을 때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	
가정	•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의 가정 • 비대칭적 정보(불완전한 정보, 정보의 편재) • 주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 상충 및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태	
대리 손실	• 역선택 : 대리인의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한 주인의 잘못된 선택이 발생하는 상황 • 도덕적 해이 :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주인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	
대리 손실 해소 방안	정보 불균형 해소	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의 내실화, 내부고발자보호제도, 행정 및 재정정보공표제도, 정책실명제, 전자정부의 구현, 공청회·청문회 등
	유인설계장치의 마련	성과급제, 신성과주의 예산, 직무성과계약제 등을 통한 성과관리
	효과적인 감시·통제장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 국민감사청구제, 불법지출에 대한 감시제 등 외부통제 강화
한계	•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불고려 • 청지기 이론에 의한 비판 : 이기적 인간이라는 가정의 비현실성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답) ④ 공공선택이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인간행위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심리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현실적합성이 낮다고 평가받는다(하이패스 행정학 p130).

<<핵심체크>> 공공선택론

의의	비시장적 의사결정(국가이론, 투표 규칙, 투표자의 행태, 정당정치, 관료 행태, 이익집단의 연구 등)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정치경제학적 접근,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
연구 방법	• 방법론적 개체주의(환원주의적 시각, 미시적 연구) • 연역적 연구
기본 가정	• 공공서비스의 성격 : 정부(정치인, 관료)는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보고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중시 • 인간관 : 합리적 경제인관(이기적 존재) - 정치인은 득표극대화를 위해, 관료는 예산극대화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며, 시민들은 무임승차자로 행동 • 제도적 장치(유인설계장치)의 마련 : 이기적 개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형성 중시
함의	• 관료제에 의한 정부실패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 시민 선호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구조와 방법 연구 • 민주적 방식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중시 • 경쟁체제(다원조직제) 확립을 통해 시민 선호와 대응성 향상 중시 •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및 파레토 최적 실현(생산의 비용 극소화와 소비의 편익 극대화) •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적정 공급영역 설정
한계	•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심리적 요소를 불고려하는 경제학적 가정의 편협성 • 시장원리의 지나친 신봉으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형평성 불고려) • 경쟁적 시장논리를 전제로 하므로 개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수적 접근에 불과함 • 관할권의 중첩과 다원조직제로 인한 조정비용 증가 가능성 • 현실적합성이 낮은 처방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품목별예산제도

(답) ③ 설명은 영기준예산제도(ZBB)에 대한 설명이다. 영기준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과정을 중시하는 총체주의적(합리주의적) 예산제도이다. 영기준예산제도는 각 수준의 관리자가 참여하는 상향적 예산제도로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갖는다.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므로 예산편성에 비용과 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하이패스 행정학 p742).

<<핵심체크>> 영기준예산제도

개념	행정기관의 모든 사업에 전 회계연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영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의 계속·축소·확대 여부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발달	정부실패로 인한 자원난 시대의 도래로 카터 대통령이 도입(1970년대)	
편성	목표설정	목표수단분석이 수행되므로 목표설정이 우선됨
	의사결정단위의 설정	· 의사결정단위 : 조직의 활동을 상호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나눈 개개의 활동단위(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데 근거가 되는 예산단위) · 의사결정단위는 실·국이나 과가 될 수도 있고 팀이 될 수도 있음(계층상 융통성)
	의사결정패키지의 작성	· 의사결정패키지 : 사업과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명시해 놓은 표 · 사업대안패키지 : 여러 대안들을 탐색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결과를 담은 정보로 비용편익 분석이 활용됨 · 증액(금액)대안패키지 : 선정된 사업대안에 대한 예산투입의 수준별 대안을 검토한 정보로 기본수준, 현재수준, 개선수준으로 구성됨
	우선순위의 설정	우선순위결정의 대상은 증액대안패키지이며, 우선순위결정은 최고결정자에 이르기까지 아래에서 상향적·단계적으로 올라가며 주관적 판단에 의함
장점	① 예산팽창 억제(감축관리를 통한 자원난 극복), ②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합리적 예산결정), ③ 분권적 예산결정(계층 간의 단절 방지), ④ 계층상의 융통성 부여(의사결정단위가 사업단위 또는 조직단위가 될 수 있음), ⑤ 과학적 분석기법의 활용(비용편익분석 등 활용), ⑥ 의사결정 지향성(합리적·체계적 의사결정), ⑦ 적절한 정보의 제시(사업대안과 금액대안 정보 제시), ⑧ 조직내부 구성원들의 참여 중시	
단점	① 사업폐지 또는 감축시 기득권자의 저항 발생, ② 시간·노력의 과다 요구(과도한 문서자료의 요구), ③ 실제적 효과에 의문(점증주의 극복에 대한 의문), ④ 예산의 정치적 성격(비경제적 요소) 불고려, ⑤ 미시적 예산결정으로 인한 전체적·장기적 시야 결여(장기적 목표 경시), ⑥ 소규모 조직의 의사결정단위 배제 가능성, ⑦ 외부의 영향 불고려, ⑧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분석에 초점, ⑨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우선순위 결정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답)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부문별·중앙관서별 지출 한도를 제시하고 각 중앙관서가 이 지출 상한선 안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 한도를 각 중앙관서에 제시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779).

<<핵심체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의의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중앙관서별·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하고 각 중앙관서가 이 지출 상한선 안에서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거시적·하향적 예산)
배경	미시적·상향식 예산제도 방식의 한계 극복
특징	- 총량에 대한 재정 규율 강화 : 지출한도의 설정으로 예산총량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 - 유사 소유권 부여 : 자율편성권 보장을 통하여 유사소유권 부여 - 비교우위에 부합하는 역할 분담 : 중앙예산기관은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각 중앙관서는 자기 업무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 예산의 주된 관심을 정책으로 전환 : 지출한도의 설정으로 중앙관서 내부에서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 : 예산편성상의 자율성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도록 성과평가를 통해 집행상의 통제와 감시는 더욱 강화 - 재정투명성 제고 : 전체 재정규모와 분야별·중앙관서별 예산 규모 등 중요 정보를 각 중앙관서와 기획재정부가 공유

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답) ④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정부의 재정기능(경제적 기능)을 경제안정화기능,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으로 제시하였다. ①은 자원배분기능을, ②는 소득재분배기능을, ③은 경제안정화기능을 의미한다. ④의 재정통제기능은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예산의 재정기능(경제적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하이패스 행정학 p680).

<<핵심체크>> 예산의 기능

법적 기능	예산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심의·확정한 범위 내에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기능 수행
정치적 기능 (A. Wildavsky)	예산은 입법부·행정부·정당·압력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투쟁·타협·협상 등을 통해 결정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 수행
경제적 기능 (R. Musgrave)	- 경제안정기능(성장과 안정의 균형) : 환율·물가·실업률 등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케인즈의 총수요관리정책 등) - 자원배분기능(효율적인 자원배분) :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에서 최적 규모로 공급되지 않는 공공서비스를 최적 생산 수준으로 생산하는 기능 - 소득재분배기능(형평성 있는 분배) :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 소득분배 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 경제성장촉진기능 : 특정 산업 등을 육성하는 기능(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기능은 아님)
행정적 기능 (A. Schick)	- 통제기능 : 의회가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LIBS) - 관리기능 : 행정부가 예산의 능률적 활용을 위하여 예산을 관리하는 기능(PBS) - 계획기능 : 행정부가 계획수행에 필요한 재정운영을 계획하는 기능(PPBS)

7.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제처 - 국무총리
- ② 국가정보원 - 대통령
- ③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답) ④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독립적 외청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467).

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 ② 이익집단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답) ②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다수에게 미치는 대중정치상황의 예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246).

<<핵심체크>>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

구분	대중정치상황	이익집단정치상황	기업가정치상황	고객정치상황
의의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다수에게 미치지만, 각각의 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는 작은 상황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동질적인 특정소수집단에 국한되고, 그 크기도 매우 큰 상황	규제의 비용은 동질적인 특정소수집단에게 집중되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큰 반면, 편익은 이질적인 일반대중에게 분산되어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	규제의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편익은 동질적인 특정소수집단에게 집중되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큰 상황
비용	넓게 분산	좁게 집중	좁게 집중	넓게 분산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넓게 분산	좁게 집중
예	독과점 규제, 방송·통신의 윤리 규제, 종교활동 규제, 각종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의약분업과 관련된 규제, 노사관계와 관련된 규제	환경규제, 소방규제, 작업안전규제, 식품안전규제, 원자력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	진입규제, 가격규제, 수입규제, 농산물최저가격제 등 경제적 규제

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규제영향분석 -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 ㄴ. 지방공기업평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 ㄷ.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ㄹ. 환경영향평가 -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답) ①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이다(ㄱ).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ㄷ). - (하이패스 행정학 p250, p384)

<<오답정리>>

- 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공기업 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ㄹ. 「환경영향평가법」(1993.6.11.제정, 1993.12.12.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답) ①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은 정책집행의 문제는 정책과 제도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제도적 환경을 거시적 집행구조(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집행조직에까지 이르는 관련 정책분야의 전 참여자와 활동)와 미시적 집행구조(현지의 서비스 전달조직)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집행은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의 특성 사이의 상호작용(정책에 맞게 집행조직을 변화시키고, 집행조직에 맞게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하이패스 행정학 p356).

<<오답정리>>

-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 네 단계로 구분된다.
- ③ ‘행정’은 정책결정을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채택’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체크>>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와 미시적 집행구조의 통로

거시적 집행구조 의 통로	행정	정책결정을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
	채택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미시적 집행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
	기술적 타당성	실행사업이 정책성으로 산출되는 것
미시적 집행구조 의 통로	동원	집행조직에서 사업을 채택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
	전달자의 집행	사업과 조직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집행해 나가는 것
	제도화	채택된 사업을 집행 조직 내에 정형화된 일부분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

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③ 조정교부금 ④ 부동산교부세

(답) ③ 「지방교부세법」은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규정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조정제도(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871).

<<핵심체크>>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조정제도

제 도	의 의	법적근거	재원
시·군 조정교부금	시·도(특별시 제외)가 관내 시·군에 대해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	지방재정법	지방소비세액의 27%
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나 광역시가 소속 자치 구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조정 제도	지방재정법	보통세수입의 일 정액
정수교부금	시장·군수에게 도세 징수의 무를 부과하고 대신 그 처리 비용을 도가 교부해주는 제도	지방세기본 법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교부율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답) ④ 강임이란 임용권자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조직의 사정)에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665).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답) ④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1항). - (하이패스 행정학 p886)

<<핵심체크>> 주민의 감사청구

의의	주민이 단체장 또는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청구주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 청구
청구객체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청구
청구사안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청구
청구제외 사항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민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청구대상이 되는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처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청구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의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함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 ④ 정책결정모형 중 엘리슨(Allison) 모형의 Model I 은 표준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답) ② 표준운영절차(SOP)란 업무수행과정을 표준화·정형화·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한 업무수행은 업무처리의 공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합리성,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392).

<<오답정리>>

- ①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면 업무처리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면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
- ④ 정책결정모형 중 엘리슨(Allison) 모형의 Model II(조직과정모형)은 표준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답) ①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은 공공선택이론 중에 하나로 고위관료들은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업무에 대한 이기심으로 인해 골치 아픈 업무나 단순 업무, 책임과 통제가 수반되는 업무 등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은 민영화·민간위탁(contracting out) 등 분봉(hiving-off)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 등으로 떠넘긴다(분봉전략). - (하이패스 행정학 p127)

<<오답정리>>

- ②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은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조직의 예산극대화보다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 ③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의하면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핵심예산(기관 자체의 운영비)의 증대로부터 이득을 얻지만, 고위직 관료들은 주로 관청예산(해당기관이 민간부문에 지출하는 예산)의 증대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 ④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은 공공선택이론 중 하나로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공적이익보다는 사적이익(업무에 대한 이기심)을 우선시 한다고 본다.

<<핵심체크>>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	의의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모형이 관료의 효용에 업무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서 간의 차이점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금전적 편익보다 업무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한다고 보는 이론
	설명	• 사업예산(해당 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에게 이전하는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제기관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음 •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반복적·일상적이며, 자율성이 낮은 계선기능보다는 창의성·자율성이 높고 정치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참모기능을 보다 선호 • 골치 아픈 업무나 단순 업무, 책임과 통제가 수반되는 업무 등은 민영화·민간위탁 등 분봉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 책임운영기관 등으로 떠넘김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에 구분하고 있다.
-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답) ③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를 지닌 규제이며,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형태를 지닌 규제이므로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245).

1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③ 자치경찰공무원
- ④ 지방소방공무원

(답) ①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이란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기준). - (하이패스 행정학 p506).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용	중전(2016.9.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답)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5만원(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금전, 유가증권 등 이에 준하는 물품)은 5만원(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원)으로 가액범위를 정하고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230).

1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답) ③ 역량평가는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참여해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이므로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ㄷ). - (하이패스 행정학 p640)

<<오답정리>>

-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성과자가 아닌 고성과자들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핵심체크>> 역량평가

역량의 개념	• 조직목표달성과 연계된 고성과자의 차별화된 행동특성과 태도 • 개인 측면의 자질이 아닌 조직 측면에서 성과 창출을 위한 자질과 능력	
역량 평가	의의	평가대상자가 자신이 담당할 업무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사전적 검증장치)
	특징	• 실제업무와 유사한 모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하는 평가 • 과거의 성과가 아닌 미래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평가 •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를 위한 다수 평가자에 의한 평가 • 추측이나 유추가 아닌 직접 나타난 행동들을 관찰하는 객관적인 평가 • 다양한 실행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는 평가
	효과	• 고위직 선발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공무원의 전체적인 국정수행능력 및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 공무원에게 자기 계발 동기와 유인 제공 • 개인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우리 나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 및 각 부처별 과장급 직위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 임용

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 ②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 ③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답) ④ 공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도 중 재택근무는 시간외근무(초과근무)의 경우 정액분은 지급하나 실적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660).

<<핵심체크>> 유연근무제 유형(5개 분야, 9개 유형)

근무형태	시간제 근무제
근무시간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근무장소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근무방법	집중근무제
근무복합	유연복합제